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홍 덕 화*

이 책, 흥미롭다. 그러나 갈증은 더 커진다. 우선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라는 책 제목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도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과학지식의 생산을 실험실과 같은 미시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질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바라보는 연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책은 1980-90년대를 거치며 과학사회학의 중심 축으로 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류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미시적 사례연구, 행위자 중심적 접근법이 정치적 문제에 무감각하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실험실 중심의 미시적 연구들이 과학정책과 과학지식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커녕 올바른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알다시피, 1970년대 이래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 구조적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과학장(scientific field) 역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이 거대한 변동을 겪은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과학사회학은 미시세계로 침잠해 들어갔다는 것이 이 책의 (편집자들의) 진단이다. 결국 이 책은 실험실 밖으로 나와 사회구조와 대면할 것을 요청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초기 과학정치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친 맑스주의적 접근법으로의 귀환

† 스콧 프리켈-켈리 무어, 김동광·김명진·김병윤 번역 (2013),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갈무리.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fruitolic@gmail.com

1) 라투르의 'Give Me a Laboratory and I Will Raise the World'를 차용한 'It Takes More Than a Laboratory to Raise the World'(Kleinman, 2003)이 이들의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적인 시각을 비판하며 사회적 관계를 폭넓게 확장해서 분석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구조기능주의적인 과학사회학 역시 이들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이 책이 스스로를 신과학정치사회학(NPSS, New Political Sociology of Science)이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시적 구조와 정치성을 복원해내고자 하는 신과학정치사회학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과학지식 생산과 활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이다. 즉 과학연구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편익의 배분, 과학연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 등을 파헤쳐 지식생산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그것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신과학정치사회학이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라 할 수 있다.²⁾ 특히 이 책은 과학의 상업화(1부), 과학(기술)지식을 둘러싼 사회운동의 확대(2부), 국가 규제의 강화(3부)를 향해 분석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 과학장의 지각변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다소 우회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각각의 관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이후의 연구를 놓고 봤을 때 신과학정치사회학이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지점은 결국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의 문제로 모아진다.³⁾ 따라서 사회구성주의의 비정치성을 비판하는 것이 그리 새로운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과학정치사회학의 새로움의 핵심은 신자유주의화로 통칭되는 거시구조적 변동이 야기한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2) 이런 점에서 신과학정치사회학의 문제의식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이다(Frickel et. al., 2010).

3) 단적인 예로, Moore et. al.(2011)을 참고할 것.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과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산학관계의 변화, 지구적 과학기술 규제체제의 확산, 사회운동의 제도적 참여와 거버넌스를 꼽고 있다. 2006년에 쓰여진 이 책과 비교해보면,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에 대한 언급이 강화되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관련 연구가 단순히 사유화·상업화 등 경제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통치성, 사회운동의 제도화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과학정치사회학은 과학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서 2장에서 등장하는 비대칭적 수렴은 이 책이 의도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대학과 산업의 상호작용(상호구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쓰인 이 개념은 대학의 기업화가 기업의 대학화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대칭적 수렴은 공동생산이나 공동구성과 같은 언어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수행되지 않은 과학과 함께 신과학정치사회학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꼽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과학정치사회학의 분석전략 또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학·정치의 영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 권력과 제도, 연결망이다.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은 과학지식 생산의 편향성을 파헤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험실에 대한 미시 연구가 지식생산의 유연성과 맥락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행위를 제약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과학정치사회학은 법률이나 정책과 같은 사회적 규칙과 규칙의 제정 과정을 권력이 행사된 결과이자 정치적 경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라보며 제도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 조직과 조직적 연결망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연결망의 변화가 제도, 나아가 권력 작동의 형태를 변형시켜 지식생산을 틀 지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신과학정치사회학은 신제도주의 경제사회학, 조직론, 사회운동론 등 여러 분야의 논의들을 끌어들이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로서 신과학정치사회학의 실체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지점도 여기인 듯 싶다. 1장에서 신과학정치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연구들과는 아직 거리감이 느껴진다. 논의 수준에 있어서 장별 편차가 제법 큰 편이라 1장을 읽으며 기대감을 키웠던 이들은 사례연구에서 다소 맥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났을 때 갈증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권력과 제도, 연결망은 어디까지나 분석을 위한 키워드이지 하나

의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간히 등장하는 부르디외의 언어를 빌자면, 신자유주의화에 직면한 과학장의 특수한 동학과 기제를 해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과학장의 변화를 구조의 효과로 환원시키지는 않지만 결과로서 구조적 경향성은 도출되고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은 사례별로 제각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례연구의 모음처럼 읽힐 소지가 크다. 어쩌면 이와 같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신과학정치사회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이끄는 동력일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이 책이 서두에서 제시한 거시적 구조 변화의 실체와 분석전략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책을 펼쳤다면 말이다. 하지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보면, 이 책의 사례들 중에는 과학기술학의 논의에 제법 익숙한 사람들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것들이 많다. 각 장이 독립된 사례연구인만큼 자신의 관심에 맞게 선별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과학·정치의 상호작용을 해부해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점이다.

이 책은 신과학정치사회학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한걸음 더 내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들도 인정하듯이, 이 책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주로 농업, 생의학, 생명공학, 환경, 분자생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미국 밖의 사례에 대한 분석도 없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신과학정치사회학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면,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진다.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학기술 역시 압축적으로 발전했고,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국가가 이 과정을 주도했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깊은 흔적을 남겼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과학기술지식을 수입·학습한 뒤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사회기술체계도 아직 그 실체가 온전히 파헤쳐지지 않았다. 냉전·반공주의의 최전방에서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시민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즉 포드주의의

위기와 68혁명의 여진 속에서 헤게모니 국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화를 배경으로 한 논의와의 간극을 좁혀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 책이 과학기술학의 정치적, 실천적 성격이 약화된 것을 우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과학기술학 연구가 현실참여적인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해 온 것 자체가 이러한 맥락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게다.⁴⁾

많은 책이 그렇듯, 이 책 또한 질문에 대한 완결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단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출발점이나 중간 경유지에 가깝다.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책은 분명 좋은 출발점이다.

4) 한국의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그에 대한 평가는 이영희(2013)를 참고할 것.

□ 참고 문헌 □

이영희 (2013), 「한국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제와 사회』, 제100호, pp. 251-272.

Frickel, S., Gibbon, S. Howard, J., Kempner, J., Ottinger, G. & Hess, D. (2010), "Undone Science: Charting Social Movement and Civil Society Challenges to Research Agenda Setting",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 35 No. 4, pp. 444-473.

Kleinman, D. (2003), *Impure Cultures: University Biology and the World of Commerc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oore, K., Kleinman, D., Hess, D. & Frickel, S. (2011), "Science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A Political Sociological Approach", *Theory and Society*, Vol. 40. pp. 505-532.